

장휘국, 교육감 후보단일화 경선 전격 수용

전교조진영 분열에 부담... 제주대 포기 비전교조 후보 6명도 단일화 속도낼 듯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사진)이 전교조 계열의 후보 단일화 경선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현 교육감 재추대나, 3자 경선이나'를 놓고 분열 양상을 보였던 전교조 계열의 진보진영은 경쟁과 통합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맞서 6명에 이르는 비(非) 전교조 계열 후보들도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난립했던 광주시교육감 선거권이 전교조 대 비 전교조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선 전격 수용 왜? = 장 교육감은 5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교육 2기를 만들기 위한 시민 후보 단일화 경선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

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시민사회 후보로 추천된 후 기대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공약을 제시해 교육감에 당선됐고, 그 공약을 중심으로 교육혁신 정책을 실행해 왔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단일화를 놓고) 진보 진영의 갈등이나 분열로 보는 시각들이 나와 고심 끝에 단일화 경선을 적극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추진해 온 '제주대'를 포기하고, 경선 참여로 돌아선 것은 전교조 출신 후보들의 분열로 표가 분산되고, 그로 인한 선거 패배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진보진영의 분열로 명분이 약해진 '재



추대'보다는 정면승부를 통해 진보진영을 깨고 안고 가겠다는 정치적 승부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평생을 함께 전교조 활동을 했던 동지들이 선거를 앞두고 갈라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진보교육의 대의 실현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누가 되든 간에 단일화는 꼭 이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 비전교조, 양강구도 재편= 장 교육감이 경선에 뛰어듬에 따라 전교조 계열의 진보진영 단일화와 비 전교조 간 양강 구도로 압축되게 됐다. 진보진영은 전교조 출신인 장 교육감과 윤봉근 예비후보, 정희곤 광주시의회이 단일화 과정을 거쳐 대표 출전하게 된다. 선거

시민 참여·감시·인사혁신 시스템 도입

이용섭 의원 시정 3대 비전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5일 "광주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장은 시민의 상머슴"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공동체 구상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광주에는 정치와 신뢰의 도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민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소통의 리더십과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리더십을 갖춘 시장이 필요하다"며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광주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협치 시스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 감시 시스템, 인사혁신을 위한 인사혁신 시스템 도입 등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세부 공약으로 ▲명예 시장제 도입



▲시민참여 정책배심원 제 도입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정책 설명제 도입 ▲시민참여 예산 편성 ▲예산 낭비 신고센터 시장 직속 운영 ▲공무원 전자회담인사 시스템 도입 ▲시민참여 인사검증위원회 운영 등 시정혁신 구상을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장 선거가 아름다운 경쟁과 정책대결의 장이 돼 의회 광장에서 새 정치 선거운동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생과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기초가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시민과 함께 정실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빛고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日 대사관 향해 1116번째 외침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 1116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실천 가능한 지역 맞춤형 공약 개발

새누리 광주시장

새누리당 광주시장당은 5일 6·4 지방선거 공약개발단(국민행복드림본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공약 만들기에 들어갔다. 공약 개발단은 이정재 시장위원장을 단장으로 대학교수,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지방선거 공약개발 및 실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약개발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대선 지역공약의 이행 상황 점검 등 진정성이 담보된 '실천 가능한 공약', 지역 특색과 실정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공약', 시민 참여 확대 및 소통하는 '국민 체감 소

통형 공약개발'을 활동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의제를 선정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약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 이미지 쇄신과 함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공약을 개발해 중앙당 조율을 거쳐 다음달 초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광주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의 선거가 돼야 한다"며 "새누리당 공약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공약을 개발해 정책대결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출판기념회 못한다

선관위, 금지행위 발표... 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비롯해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5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오는 6월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

문·잡지·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등 공직 신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

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함관인, 부재자투

표함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이산 상봉 정례화 12일 실무접촉 갖자"

정부, 北에 공식 제의

정부는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오늘 중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박 부대변인은 "우리측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측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해 우리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한에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즉각 호응해 올지는 불투명하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은 최근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왔다. 북한은 구제역 방역을 돕기 위한 우리측의 지원 제의에도 열흘 가까이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북한이 우리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고 수정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주식회사, 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직통,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돈 빌려 주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